

“화순탄광서 희생당한 아버지 한 풀어주세요”

한국전쟁 전후 전남 민간인 희생자 유족 ‘한자리’ 26개 유족회 도의회서 첫 간담회, 지원조례 모색

“화순탄광에서 미군에게 희생당한 아버지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세요.” 한국전쟁을 전후해 희생당한 전남지역 민간인 유족들이 한데 모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도의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2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에는 현재 목포와 곡성·신안을 제외한 19개 시·군에 26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활동하고 있다. 여수·순천을 중심으로 한 여순사건·

여수항쟁 유족회를 비롯, 나주 봉황면 양민학살유족회, 구례 5·28유족회, 무안 백동묘역유족회, 함평 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이 대표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족 대표들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은 수십년간 가슴에 응어리를 담고 살아왔다”며 “피맺힌 한을 살아생전에 반드시 풀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조례 등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호남다지역과거사 유족회 고재언 회장은 “민주정권시대가 들어선 만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도의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억울한 유족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희림씨(화순 도곡면·77)는 “민간인 유족들이 한데 모인다는 소식에 참여했다”면서 “지난 1946

년 화순탄광에서 아버지 양재강씨가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며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과 사연들을 도 조례에 담아 무고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통탄을 다독여 줄 계획이다. 기획행정위 이해자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아픔을 가슴에 담은 유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유족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대한 방향을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재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현 조례를 보완해 선양사업을 구체화 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 단독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근산 기자

“공익형직불제, 산림·어업 포함해야” 김승남 지역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은 5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농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림·수산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살생 중심의 직불제로 인해 농업분야가 감축 대상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했다”며 “산림업·수산업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이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다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수산업은 공익개념이 명확하고, 해양오염 방지·어업환경 보전·친환경 어업·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림은 홍수방지·공기정화·온실가스 저감·국민건강 증진·임산물 먹거리 제공 등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자원임에도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은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직불제 개편 안에 공익형 수산직불제 산림 직불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진중언 기자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마’ ... 대책 필요

일부에선 “지방분권 기초 맞춰 법제화해야”

광주시의회 의원이 보좌관 급여를 되돌려받아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되는 유급보좌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유급보좌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8대 개원 이후 21명의 보좌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주 35시간·라급)으로 광주시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

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만, 사실상 의원의 개인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을 각출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시의회는 7대부터 유급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맞지 않아 편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의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영해왔다. 시의회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된 유급보좌관 문제는 이번 ‘급여착복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의 당사자인 나현 의원은 시간선택

제 임기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을 보좌관에게 채용대가로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유급보좌관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기초에 지방행정사무가 갈수록 늘어나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의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5일 “의원으로 서 일할만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급보좌관제의 필요성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정기 브리핑

황주홍·서삼석, 한농연 선정 ‘국감 우수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14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인 한농연이 개최한 행사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농연은 농업계 처음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상식을 개최해 올해 14회째를 맞고 있다.



황주홍 서삼석

한농연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수조사, 한농연 국정감사 모니터링단 자체 평가, 농업 정론지 기자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촉구 ▲ASF 소독제 효능 문제 ▲가축전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방역형 신설 촉구 ▲농어촌 인구소멸위 기극복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협업간 협치 모델 제안 등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이다. 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작은 심부름꾼으로 노력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조금이나마 긁어 드릴 수 있는 사원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강병운 기자

황 의원은 “상임위원장에서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는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면서 “농어민들의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촉구 ▲ASF 소독제 효능 문제 ▲가축전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방역형 신설 촉구 ▲농어촌 인구소멸위 기극복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협업간 협치 모델 제안 등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이다. 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작은 심부름꾼으로 노력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조금이나마 긁어 드릴 수 있는 사원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강병운 기자

‘어린이집 예산 증액’ 도의원 윤리심판원 회부

민주 전남도당 “직무 관련성·조례 준수 여부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도의 내년 민간 어린이집 지원 예산 증액 논란의 중심에 선 자당 소속 도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5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A의원의 민간 어린이집 예산안 부적절 심의 안건을 도당 윤리심판원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A의원이 보건복지

환경위 소속 상임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관련 조례와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당원으로서 적절하게 행동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보건복지환경위는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린이집 반별 지원금을 도청 제출안보다 무려 3배나 증액해 물의를 빚었다. 어린이집 예산 증액 제한은 역시 민주

당 소속 B의원이 했으나 A의원은 조례를 어기고 상임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참석했다. 특히 A의원의 부인이 도내 최대 규모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또 지난달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안건 심의에 관련 의원을 배제하도록 했었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민주당 도당윤리심판원은 오는 16일 열린다. 윤리심판원은 주의 경고·당원 자격정지·출당조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근산 기자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서구일자리센터 JobCafe

청춘발산 공작소

모든 혜택이 공짜인 Job cafe에서 내일잡(Job)고 내 꿈을 키워보아요~

상무대로 | 삼익면선 | **무진대로**

죽봉대로 | 농성역 | **죽봉대로**

화정중흥파크 수안12/지한25/금호36/영신37 문흥39/송암68/송암72/1187 한국자산관리공사

금호빌드 | 신세계백화점 | 교원공제회관 | 신세계백화점 지한25/금호36 문흥39/송암68/1187

직업상담사가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구직 정보

청년 취·창업 공간제공 (회의실·스터디룸)

NCS 직무교육, 면접클리닉, 취업박람회 등 Job Conference

커피한잔, 독서한권, 웹서핑, 명태리기 등 맘껏 힐링가능

서구 내방로 392(한국자산관리공사 별관 1층) Tel: 062-369-8061~2 Fax: 062-369-8060